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이같은 인식 변화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특히 판결문 속 산재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법인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3년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유예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명이 숨진 18개 사건, 실형은 단 2명=광주지법이 지난해 다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모두 23건. 1심 18건, 항소심에서는 5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 판결이 났다.

이들 판결문을 모두 분석한 결과, 12명의 노동자 사망으로 인해 28명이 기소됐지만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고 실제 수감된 경우는 2명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형 집행이 미뤄진 케이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도 항소심에서는 모두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이 이들에게 선고한 평균 형량은 징역 6.63개월이었다. 28명 중 12명이 '징역이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는 전무했다.

◇안전조치 소홀해 노동자 사망했는데 벌금도 고작 400만원=벌금 액수도 턱없이 낮았다. 광주지법이 1심과 항소심에서 12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고용주나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한 벌금 총액은 9500만원. 노동자 한 명당 고작 527만원의 벌금을 낸 것이다. 개인으로는 평균 400만원, 법인은 478.5만원이었다. 수천만~수억원, 수십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다 안전 사고를 낸 기업에게 책임 비용으로 47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고 뒤 합의·처벌 비용이 적은 경우 안전조치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20년 광주·전남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공〉

지난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54)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이 전부였다. 오죽했으면 피해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한개의 안전 장비도 없이 7m 높이에서 작업하다 숨진 목숨값으로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이라는 것을 납득하겠냐"고 하소연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법인에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에 도달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도 잘못 있다", "보험금 받아서" 감형=광주지법의 판결문에는 법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문구가 적지 않다.

7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망 노동자도 안전고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한 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피해자 과실도 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도 참작됐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또 상당수 판결문에서는 노동자의 과실 탓도 지적됐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반영했다는 문구는 관행구처럼 자주 반복됐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문 5건 중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건의 경우 모두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해당 사업장 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나머지 3건 중 형이 늘어난 것은 벌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많아진 게 고작이다.

◇산업재해, 이정도 처벌 수위로 억제될까=노동계를 중심을 이 정도 처벌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8명(광주18명·전남50명)에 달한다.

올해 3월까지 광주에서만 5명, 전남에서 5명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을 거뒀다.

노동계는 폐목재 가공업체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산업재해 처벌 목소리 높아졌지만 법원 분위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최근 들어서야 이를 인식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재 형량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마련 올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법의 양형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법원·수사기관의 인식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사망을 '기업범죄'로 인식시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산안법상 처벌이 너무 경미해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사고를 막기위해 드는 비용보다 벌금이 적게나온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바뀌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여전히 과거의 인식과 반복되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사한 봄 꽃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동행정복지센터로 보낼 메리골드와 가자니아 등의 봄꽃을 분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에 차량 줄어드니 질주 본능 생겼나

전남 과속 차량 2019년 9525건→ 2020년 1만120건 급증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 차량이 줄어서일까. 전남지역 과속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은 8997건(2018년)→9525건(2019년)→ 1만 120건(2020년)으로 증가세다.

제한 속도 초과 차량은 행락철인 3~5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 1만 120건 가운데 30%가(3003건) 3~5월에 몰렸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제한 속도 초과 차량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76만 9093건(400억 1862만원)를 부과했다. 지난 2018년 65만4426건(326억 8153만원), 2019년 65만 8470건(332억 6326만원)에 비해 과태료 부과 대상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운전자들의 과속·부주의 뿐 아니라 과속·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단속카메라가 많아진 게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지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2018년 348대에서 지난해 614대로 1.76배 늘었다.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된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도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

아내 폭행 방치 숨지게한 남편 8년형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56년간 함께 산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81)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